

전문가에게 듣는다(識者に聞く)

## IMF·世銀 総会(2012 동경)

2012.10.06  
毎日新聞社 제 6면

**Q. 97년의 통화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에 고금리정책과 긴축재정을 요구하고, 한국경제를 필요 이상으로 혼란시켰다고 비판받았다.**

A. 어떤 측면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옳은 정책이라 생각한다. 과도했다는 면은 있었으나 IMF도 그 이후 한국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Q. IMF 정책은 그 이후에 변화되었습니까?**

A. 아시아 통화 위기의 시행착오를 거쳐, 원칙을 지키면서 교조주의적이 아닌 유연한 대응을 취하게 되었다.

**Q. 통화 위기 후, 한국은 더 분명한 세계화 노선을 취했고, 이때부터 일본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A. 그 당시 한국과 일본은 금융위기의 고통을 겪었다. 일본은 그뿐이었지만 한국은 게다가 통화위기도 더해져 IMF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세계화에 따른 외압을 통해(고용의 유연성과 기업지배 구조개선 등) 구조조정을 단번에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던 개혁이었다. 한국 경제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후, 재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기에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Q. 2010년 가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A. G20 정상회의는 주요 7개국(G7)만으로는 금융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이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은 세계경제의 판도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이었다. 한국으로서도 G20 회원국에 포함되고, 더욱이 G20 의장국이 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였다. 왜냐하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한국은 1세기 전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Q. 동북아시아의 지역정세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 고쳐야 할 역사의 유산을 극복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세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여러 면에서 더 발전해있고,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적인 입장인 일본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공일

1940년 한국 경상북도 출생. 미국 유학 후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 경제학을 가르침  
귀국 후 한국 재무장관, 대통령 경제 수석 비서관 등을 역임